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9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최호정, 강석주, 경기문, 구미경,
고광민, 곽향기, 김길영, 김영철,
김경훈, 김규남, 김영옥, 김원중,
김동욱, 김영호, 김재진, 김태수,
김용일,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김지향,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김현기, 남궁역, 남창진, 남병주,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남병주,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76명)

1. 주문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중앙정부의 주도로 도입된 무임승차 정책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 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현재는 도시철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매년 급증하는 무임승차와 낮은 운임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 고령 인구 증가로 무임 승차 대상 인원이 급증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비용부담 가중 및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라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지원을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21조 및 「도시철도법」

4. 이송처

-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

국민의 발이 되어 생활과 경제 일상을 잇는 도시철도가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도시철도는 일일 이용객만 수도권 800만 명, 전국 2천 500만 명에 달하는 필수 대중교통임에도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무임승차 인원 급증,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코로나 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전례 없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1984년 중앙정부의 주도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누적은 지속되고 있어, 최근 5년간(2018~2022년) 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운송적자 9,153억원 중 무임손실은 3,165억원으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의 총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7년 13.8%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7.5%, 2025년에는 2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앙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부담에 대한 국비 지원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으며, 정부도 어떠한 지원과 대안 마련의 노력 없이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시는 무임승차 정책 도입을 주도했던 정부 대신 매년 수천 억원의 무임손실을 떠안고 2015년 이후 대중교통 요금 동결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가 주도한 공익 서비스 제도가 본 취지와 다르게 철도 경영과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서울 도시철도는 오랜 연한으로 인해 노후 시설 교체 및 보수 등 안전한 운행 환경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나, 지난 40년간 누적된 적자 구조로 인해 승객 안전 및 철도서비스 향상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어 국민의 안전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의회는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배제된 국가사무임에도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전 규정이 없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국회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공익 서비스 제도의 정책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비례배분 하여 국비 분담분을 정하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라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